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현구

독자권익위원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지리재단 대표이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금 천년의 기회 앞에 서 있다.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역시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해 온 전남광주에 이보다 더 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수많은 전후방 기업과 전문인력, 연구개발과 교육, 서비스산업까지 함께 움직인다. 제대로 뿌리내린다면 전남광주의 산업지도를 바꾸고 청년이 떠나는 지역을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말 계획대로 될까”, “기업이 나중에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대규모 장기투자인 만큼 전력과 용수, 인력과 정주환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만 하며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기업이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이번 기회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800조 반도체 투자, 이제 시민이 화답할 차례

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새로운 축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성과 인프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마지막 한 축이 더해져야 한다. 바로 전남광주 시민의 힘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은 정부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제도와 지원책 못지않게 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기업하기 좋은 전남광주 만들기 시민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가장한 조직이나 예산부터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지역사회 전체가 “전남광주는 기업을 환영합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자. 시민·경제단체·노동계·대학·언론·공공기관이 함께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살펴보자. 새로 오는 기업과 근로자, 가족들을 외지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도 만들어 가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삼성과 SK의 지역 투자 계획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지역에 투자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기업사랑 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을 환영한다고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환경·노동·안전과 사회적 책임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잘하는 것은 박수치고, 필요한 것은 함께 해결하는 성숙한 지역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아니다. 반도체는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1·2차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 산업이다. 800조원의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뒤를 따라올 기업들이 전남광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저 지역은 기업을 환영한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해결하려 한다. 직원과 가족이 내려가 살아도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가 기업인들 사이에 퍼진다면 그보다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시민운동은 삼성과 SK만을 위한 운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남광주의 기업문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지, 기업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물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800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10년, 20년 뒤 전남광주의 모습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AI·데이터·에너지·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청년이 떠나는 지역을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기업이 투자 의지를 바꿀까 걱정하기보다 기업이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도록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행정만의 일도, 정치권과 경제계만의 일도 아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일이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도 지역의 실력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의 선택이 기회를 만들었다면, 이제 전남광주 시민의 힘으로 천년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 차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박봉순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권력은 늘 움직인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권력이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적은 없다. 요즘 세태를 보면 모두가 권력자이거나 권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정치, 사회, 학교, 기업, 가정에서까지 권력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권력은 권한에 비례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저 권한만 가지려 하니 권력의 이동과 변화가 일어나고 비권력자가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포장돼 세상에 나타나지만, 이것은 허상일 뿐인 것 같다. 권력이란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 선택, 인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력은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견제하고 균형 있게 작용해야 바로 서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중세에도 왕권, 귀족, 교회가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로마제국 붕괴 이후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 영주와 귀족의 영향력이 커졌고, 이것이 봉건제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왕의 직접 통치가 어려워 영주들이 군사력과 행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중세 후기로 갈수록 상업과 도시가 성장하고 화폐경제가 발

권력의 변화

전하면서 왕이 세금을 확보할 기반이 커졌다. 귀족에게 의존하던 군사력과 행정력을 중앙으로 끌어오면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가 시작됐다. 이렇듯 권력은 시대와 사회,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이다. 지난 2일 권력기관으로 인식돼 온 검찰청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시행 초기부터 좌우의 대립과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쏟아졌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사회적 질타 속에 입법 절차를 거쳐 사라지게 됐다. 출속적인 처리였다. 권력의 시너였다. 개문발차를 했다. 민생은 사라지고 피해자만 억울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금 더 공론화 과정과 체계를 다듬어서 가도 되는 것을 이리도 조금하게 가는 데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어 쓸쓸한 생각이 든다. 권력은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권력이라는 말에 먼저 정치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 권력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넓은 의미에서는 권력이다. 우리 사회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한곳에 모여 있던 힘이 여러 곳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가졌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통로가 많지 않아 언론이나 기업, 전문가가 정보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의 소식을 금세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글과 영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도 한다. 개인의 말이 때로는 수십만 명에게 전해진다. 일부에게 집중됐던 정보의 힘이 개인에게도 옮겨온 것이다. 이는 권력이 사라지기보다 집중됐던 힘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있던 힘의 일부가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로, 기업의 힘 일부가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 조직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보다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문제는 권력이 나뉘었다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국민은 국가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지 않고 그 과정에 자신의 뜻이 반영되기를 원한다. 정치권력을 판단하는 기준도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보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정치권력을 맡은 사람은 주어진 힘이 개인의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 역시 권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도 책임을 가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력은 계속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힘이 한곳에 지나치게 모이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검찰청 해체로 권력이 경찰로 옮겨가는 데 따른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국민만을 생각하고 나라의 올바른을 잡아가는 책임질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면 좋겠다. 기존 권력이 흩어지는 자리에서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난다. 따라서 권력의 변화를 ‘누가 힘을 갖게 되었는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살펴야 한다.

오늘날 영화관은 더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바뀌었고,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 역시 달라졌다. 그러나 광주극장의 가치는 효율과 속도의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영관 하나를 지키고, 오래된 건물을 고쳐가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온 일은 도시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온 일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광주극장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여전히 영화가 상영되고, 관객이 드나들며, 새로운 이야기가 쌓인다. 그런 점에서 광주극장의 가치는 오래될보다 계속됨에 있다.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 극장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마침 광주극장은 개관 91주년을 맞아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관객을 맞는다. 문화제 등록을 앞둔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살아 있는 역사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다. 광주극장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불을 밝히길 바란다.

사설

동구의 힘…광주극장 국가문화유산된다

광주극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역사적·문화적·건축적 가치를 인정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예고는 30일간 진행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된다. 사실 광주극장은 1935년 국내 최고(最古) 단관극장으로, 단순한 영화 관람 공간을 넘어 근현대사의 중요한 문화·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 공간이다.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법인이 운영한 곳으로 일제 강점기, 영화 상영은 물론 창곡, 판소리 등의 공연과 단체 회합 장소로 활용되며 조선인들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해방 후에는 집회 및 문화교육운동의 장소로 기능했으며 현재는 국내 유일무이한 단관 극장으로 지역 영화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건축적 가치 또한 높다고 한다. 수평 곡선 콘크리트 처마를 활용한 현관 캐노피 구조(기둥이나 벽체에 지붕을 연결해 비와 햇빛을 막는 외부 보호 구조물)는 당시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1950~1960년대 건축에서 활용된 공법이 담겨 있다. 1968년 화재 이후 재건축됐지만 이 과정에서 작성된 일련의 기록들은 당시 건축적 정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상하층 객석, 영사공간, 곡선형 처마를 중심으로 한 전면 파사드에서 당시 지역 극장 건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극장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이 컸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4억7500만원을 모아 낡은 영사기와 냉난방 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했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과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했다. 이에 광주극장은 지난해 9~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 1·2차 심의를 통과했고 11월 국가유산청에 ‘광주극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 5월21일 국가유산청의 전문가 현지 조사, 지난달 22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지정가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것이다. 광주극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수도권 편중 ‘K-디지털 트레이닝’ 개선 시급

첨단산업 실무 인재를 전국에서 양성하겠다는 취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이 점차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훈련기관과 지원금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KDT 훈련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4759억 8400만원인데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관에 93.9%인 4467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6.1%인 292억3600만원이 비수도권에 지원됐고 전남광주는 54억700만원(1.1%)을 받았다. KDT는 민간 훈련기관과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반도체 등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프로젝트 과제를 전체 훈련과정의 30% 이상 편성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훈련기관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국 KDT 훈련기관 341곳중 수도권(256곳)이 75.1%를 차지했고 전남광주는 광주 8곳, 전남 2곳 등 총 10곳으로 전국의 2.9% 수준이었다. 분야별 훈련 인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의 AI 분야 참여인원은 8786명으로 전체(9619명)의 91.3%를 차지했고 전남광주는 317명으로 3.3%에 그쳤다. 빅데이터 분야는 수도권이 5028명으로 전체(6857명)의 73.3%, 전남광주는 352명으로 5.1%였으며 클라우드 분야는 수도권이 426명으로 전체(4555명)의 97.2%였고 전남광주는 한 명도 없었다. 문제는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인재양성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교육격차 현상이 지역 간 산업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 성장 기회의 불균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과 지역 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실습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기반을 확충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하다.

취재수첩

시간이 품은 가치

정 채 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가유산청이 광주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오래된 극장 하나가 문화재가 된다는 것은 그곳을 드나든 사람들, 스크린 앞에 앉아 울고 웃던 시간, 도시가 함께 쌓아온 장면들이 문화적 기억으로 인정받는

일이다. 광주극장은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관객을 맞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거리였던 충장로에 문을 연 광주극장은 판소리와 창극을 올리며 지역민의 한을 달래던 공간이었다. 당시 이곳에서 울려 퍼진 극장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 ‘쑥대머리’는 민중의 한과 설움을 담았고, 백범 김구 선생의 방문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극장을 둘러보면 의자와 스크린, 계단과 로비 등에서 시대마다 낸 다른 표정과 마주할 수 있다. 극장은 그렇게 개인의 기억을 품으며 도시의 시간을 함께 쌓아왔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형만	사 장 정현민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면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